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 평화 NGO의 기능과 역할\*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NGO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시 세력으로서 NGO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점차 성숙되어감에 따라 NGO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실질적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평화운동도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활발한 활동과 아울러 성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체제의 유지와 아울러 평화정착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은 실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의 근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요소였다. 남과 북은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분단은 남북한의 체제형성과 발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간의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사회는 대립과 갈등의 일상성속에서 평화적 공존의 가치에 무감각했다.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한국의 시민사회도 상당부분 비정상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통일문제는 분단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한국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추진력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배제와 강요의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평화문화의 정착은 남북통일의 핵심적 전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스스로의 장애를 치유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과정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분단체제에서 비롯된 냉전문화를 해소하고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성찰적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과 대립이 내재된 상태에서의 평화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경기평화포럼(2006. 6. 21) 「한반도 평화: 안보경영을 넘어 평화경영으로」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 II. 한반도 평화와 시민사회

분단은 한반도를 장기간 냉전구도 속에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갈등과 대립의 일상화라는 부정적 특성들을 구조화시켜왔다. 세계적인 냉전구조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의 대내외적 유제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핵위기와 남남갈등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냉전의 상징적 징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분단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경우 평화문화의 형성은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평화변영정책의 근본적 철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반도에 고착되어 있는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문화형성의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주체는 냉전적 대립구도 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던 단순성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 국내외적인 영향들이 중첩되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관점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문제의 복합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1</sup>

첫째, 한반도문제에 관여하는 비 국가(non-state)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해져서 남북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말하자면, 한국문제와 관련한 많은 행위자들은 국가차원의 통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

둘째,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국가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북한의 국가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한반도 경계를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영토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반도문제의 이슈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슈들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며, 긴장을 증대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국내에서 국제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좁은 의미로는 남북한 관계와 넓은 의미로는 한반도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슈들이 중층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와 영역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의 형성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와 같은 한반도 문제의 중층적 복합성을 해소하는 방법론적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sup>2</sup>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북한이슈는 남북한과

<sup>1</sup> 조한범, 김성철 외,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7~8.

<sup>2</sup> 조한범, 김성철 외,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2~13.

동북아의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자, 지구촌 전체의 공동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으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통적 행위주체는 물론 초국가기업, 국내외 NGO 등 새로운 행위주체가 관여하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와 영역들이 협력적 관계를 포함하는 접근방법인 거버넌스차원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거버넌스개념은 국가와 NGO,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내기구간의 효율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국내의 차원을 망라한 주체와 영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주제에 대해 공통적 관리·자원통제·권력 행사를 위한 방법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관용’은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관용의 확산과 일상화를 억제했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이분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외교안보적 이슈와 북한문제에 대해서 여론 역시 양극화될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는 소모적 정쟁의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아울러 정책의 추진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양극화와 정부의 대처능력의 한계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지향하는 구체적 노력 역시 이와 같은 내적인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이 없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및 정책은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 한반도의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노력과 아울러 동시에 남한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문화형성의 핵심적 주체로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III. 한국의 평화 NGO

한국의 평화 NGO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연동되어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는 한국의 평화 NGO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발생적 단계에 있는 시민사회를 침식하고, 통제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 민주화를 위한 저항세력을 배양했다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다.<sup>3</sup>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며, 시민운동에 기반 한 NGO가 급증한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해서이다.

1987년 이전 사회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라는 공동의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sup>3</sup>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 75.

시민운동, 급진노선과 온건노선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을 계기로 점진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운동사이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초기에는 민중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NGO가 출현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이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및 신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이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주력했던 이전과 달리 사회운동의 이념과 주제, 그리고 운동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순수시민운동,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법운동을 지향했다.<sup>4</sup> 전반적으로 1987년 이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국민의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활동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1987년 이후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는 질적 변화를 동반하여, 단체의 조직양상이 분화되고, 활동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등과 같은 불특정다수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 평화NGO의 형성과 발전과정 역시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과 남북관계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전체제의 분단구조는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이 내포된 비평화상태의 극단적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평화적 공존의 담론을 원천적으로 제약했다. 따라서 정치적 독재와 극단적인 냉전적 대립체제 속에서의 평화담론과 평화운동은 제기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친북·이적행위로까지 몰려야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 및 냉전의 해체와 아울러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기류가 형성되면서 NGO의 활동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연계되어 대북지원에서부터 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부분 보수진영의 경우, 한미동맹과 반공주의에 기초한 대북압박이라는 논리와 친화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분단체제에서 진행되어온 평화운동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의 기원은 대부분 진보진영의 사회운동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1987년 이후, 평화운동은 사회운동세력의 통일논의 제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논의에 대한 사회운동은 ‘민족해방적 자주 통일운동’이라는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변화된 평화운동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족해방적 자주 통일운동은 학생운동권과 종교계, 재야인사 등 3자 연대형식으로 민족해방적 통일운동을 시도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면도전, 방북, 공동정치선언 채택 등을 통해 냉전체제에서 금기시되어있던 통일담론을 공개적으로 구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민족해방’적 관점에서 친북반미일변도의 경향 및 인권과 평화 등의 가치 기준들을 등한시함으로써 90년대 말 통일운동세력의 고립을 초래했다. 북한위기구조의 심화와 대북포용정책의 구사로 인한 남북관계지형의 근본적 변화 등은 분단극복운동과 평화운동이 점차 다변화하는 상황적 조건들로 작용했다. 따라서 북한돕기운동의 확산 및 북한인권운동의 대두, 평화군축운동의 확산, 그리고 안보국가와 냉전적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개혁운동 등으로 평화운동의 영역이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평화 NGO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및 사회적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기원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sup>6</sup>

<sup>4</sup> 성경룡·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연구」, pp. 18~19.

<sup>5</sup> 이태호, “평화운동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인식”,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워크숍, 2006.4.11), pp 2~5.

첫째,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그룹으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이념의 협애함과 정당한 폭력 개념에 대한 수용적 자세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 속에서 평화운동을 모색했다. 해월 최시형의 평화사상을 발굴·소개했고, 90년대 후반 이후 김지하를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점에서 한국적 평화 담론 형성에 있어 선구적이었으나 대중성과 연대성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그룹은 2004년 ‘(사)생명과 평화의 길’을 창립하였고, 2003년부터 개최된 ‘세계생명문화포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80년대 민중운동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그룹으로 민족 해방적 자주통일운동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중심적 가치를 ‘자주’, ‘민주’, ‘통일’로 설정함으로써 평화의 개념은 이러한 가치에 종속된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평화’는 정치적인 개념이자 반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전쟁연습팀 스피리트 훈련 반대와 같이 정치 군사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4년에 결성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그리고 ‘통일연대’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셋째, 90년대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그룹으로 80년대 후반의 민주화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시민 운동으로부터 출발하는 단체들이다. 90년대의 경우 이들은 독자적 평화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경제정의, 환경, 인권, 소비자문제 등 분야별 운동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안별로 이슈가 제기될 때 연대세력으로 참여하는 양상의 운동을 전개했다. 1997년에 결성한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의 결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7년), ‘국제민주연대’(1999년), ‘평화포럼’(2000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3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 나눔센터’(2003년) 등이 평화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넷째, 이외에 기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평화운동 그룹들이 있으며, 이들은 1998년의 ‘평화인권연대’와 1999년의 ‘평화네트워크’와 같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평화운동 단체들로 대중단체 성격 보다는 소수 활동가 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그룹들이 등장했으며, 소규모·On-Line 기반의 조직적 특성에 기반 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에 설립된 ‘전쟁 저항자 인터네셔널 코리아’, 2004년에 설립된 ‘전범민중재판운동’, ‘함께 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해서 소수자 권익 운동 차원의 다양한 이슈들이 평화운동의 과제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2002년에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민주화 운동과정에서의 피해보상 등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모색하는 그룹들로 큰 틀에서 평화운동과 관계되는 경우이다. 1993년에 결성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를 출발점으로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매항리 미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평화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추상적인 이념적 영역에서 벗어나 점차 구체적 형태를 띤 실천운동으로

<sup>6</sup>이중무, “한국 평화 NGO의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워크숍, 2005.12.21), pp. 1~3.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 NGO활동은 그 동안의 긍정적 활동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평화운동 NGO의 독자적 역량에 있어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슈에 따른 대응과 연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화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적 관심사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는 한국의 평화 NGO들의 양적·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생적 기반을 마련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의 설정과 아울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한국평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 1. 냉전문화의 해체와 평화문화의 정착

한국의 평화운동은 반독재투쟁에서 출발하여 통일문제와 관련, 주로 반전, 평화군축 등 직접적인 평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활동영역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분단구조의 내포와 외연을 동시에 해소하는 적극적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단체제는 대립과 갈등의 일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를 한국사회의 구조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분단구조는 이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한다. 남한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 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를 지녔으며, 탈 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보혁 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전문화가 남북한 간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는 관성을 지니며, 이는 종종 과거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역사의 평범한 상식이다. 냉전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를 양극화시켰다는 점이다. 냉전문화는 문화적 다원성과 이념적 포용성의 형성을 극단적으로 억제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에 중첩되어 투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거부가 사회의 지배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등에 대해서 나타났던 여론의 양극화와 극단적 의견의 대립은 냉전문화의 영향에 의한 구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평화운동

<sup>7</sup>이중무, “한국 평화 NGO의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워크숍, 2005.12.21), p. 5.

은 냉전문화의 해체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평화문화의 정착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갈등에 의한 구분인 적극적 평화 보다는 소극적 평화개념과 친화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의미의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전쟁회피의 개념에 기초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정의, 민주적 질서, 국가 간 협력 등이 충족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적극적 평화상태이다. 평화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하여, 평화의 주체들이 폭력을 제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평화를 조성하는 문명화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화의 가치와 규범이 생활세계에서 습득될 수 있다면 평화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sup>

한국의 평화 NGO는 보다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냉전문화해소와 평화문화정착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보혁의 정상적 공존형태로 정착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구조는 대립과 갈등을 온존시키고 사회의 불안정성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보혁 간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보혁 간의 정상적인 공존관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진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방식 역시 흑백논리차원의 청산방식이 아닌 공존의 논리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는 보혁간 갈등구조의 해소는 평화운동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구현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가능하도록 사회운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립적 대화단절의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시민사회차원의 '열린 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up>9</sup> 사회세력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대화가 가능한 중간층을 확대하는 노력은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냉전문화의 해소는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근대화과정의 왜곡된 요소를 청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다양한 제약으로 작용했으며, 근대화의 정상성을 저해해 왔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조건 속에서 진행된 남북한의 근대화과정 역시 근대화의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난 왜곡된 특성을 일정부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근대화의 비정상성은 남북한에 공히 내재해 있는 것이다. 남한의 근대화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성공'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갈등과 사회의 양극화는 분단체제 근대화의 정신적·물질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 역시 남한사회의 건강성회복이라는 전제적 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북한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방식의 통합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낳을 뿐이다. 남북한의 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과정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통

<sup>8</sup> 조한범 외, 『동북아평화문화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1~13.

<sup>9</sup> 이를 위해 '플레랑스 21' 혹은 '화해운동'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사회운동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합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넓은 의미에서 평화운동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평화 NGO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2. 평화운동에 대한 동북아관점의 적용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자본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냈으며, 세계화는 동시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지역국가간의 통합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의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다. EU의 사례는 이와 같은 변화의 구체적인 산물로 근대국가의 경계를 상당부분 완화시킨 새로운 변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근대국가를 형성시킨 근대의 인식 틀을 넘어선 탈 근대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가주의의 기본 틀과 관념을 상당부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선진국들이 생존과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선택하고 있다. 갈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EU라는 거대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와 같은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북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이미 떨 수 없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굴절된 동북아의 근대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에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근대는 근대에 대한 성찰적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관련 국가들은 아직도 근대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럽과 다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는 경제대국 일본, 1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상호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협력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간의 관계는 어느 일방과의 관계단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간 인적교류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아시안컵 축구대회기간 중 중국과 일본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나타났던 충돌과, 이후의 양국 국민간의 갈등적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된 일화는 한·중·일간의 관계의 불균형적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심화된 상호의존성과 인적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각국 간의 관계는 갈등적 심층구조를 내재한 상태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촉발요인만으로도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며 경제적 협력대상이지만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한중관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일경제의 긴밀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강행이나, 유사법제의 제정, 그리고 교과서 왜곡문제 등은 양국 국민간의 갈등적 정서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관계의 확대와 아울러 갈등적 관계가 반복되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주된 이유는 침략과 피침이라는 동북아국가간의 갈등적 근대사에 일차적으로 기인하



며, 근대사의 갈등구조가 이후에도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각 국가 내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근대화와 한반도 강점,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과 이후의 첨예한 냉전적 대립 등은 왜곡된 동북아 근대사의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계기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사의 왜곡된 진행과정에 의해 동북아 관련국들의 평화적 공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동북아에서 근대사의 왜곡된 진행과정이 과거의 요인이라면 현재적 관점에서도 동북아 각국은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해소되지 않은 근대사의 유제들이 각 국가내부에서 온존된 채 배타적 민족주의와 친화력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문화적 지형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국가 간 협력적 관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관용적 국민정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순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동북아의 각 국가간 관계 혹은 각 국가내부에서 조차 상대방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노력은 갈등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수로 전락했으며, 국민적 정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첨예한 대결적 국면에 더 친화력을 보여 왔다.

갈등구조의 온존은 외교안보적 차원의 경쟁과 대립구조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로운 군사강국의 출현’ 등은 상대방에 대한 긴장과 경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담론들이다.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모순적 이중구조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동시에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평화문화의 형성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각 국민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의 긴밀한 상호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거리감이 상존하는 것은 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형성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본질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적교류와 함께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으면서도 한중일간의 거리감이 상존하고, 상호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동북아가 지역 차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함께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완성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민간의 문화적 친밀성을 의미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이 병행되지 않는 경제적, 외교안보적 공동체는 취약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는 결국 동북아의 굴절된 근대사를 바로잡는 시도, 즉 동북아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사의 왜곡이라는 과거의 요인이 동북아의 내면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는 동북아의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문화형성이라는 현재적 관점의 노력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굴절된 근대사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문화 형성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분단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경우 평화문화의 형성은 보다 실천적 합의를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평화변영정책’의 근본적 철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

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반도에 고착되어 있는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형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냉전체제는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국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정치, 외교적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경험과 연계된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차원의 역사적 경험과 연계되어 있는 다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개막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동북아 협력이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형성을 지향하고, 한반도 내부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평화문화의 형성과 이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의 인식이라는 보다 포괄적 틀 속에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NGO는 동북아 평화문화형성의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한반도와 동북아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동북아 근대사의 산물이자 경직성을 지닌 각 국 정부차원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sup>11</sup> 따라서 NGO는 동북아 평화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평화의 관점에서 NGO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경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NGO는 시민 권력으로서 그 영향력이 지구촌차원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NGO는 이미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NGO는 GO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바,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NGO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의 평화관련 NGO들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동북아 NGO평화연대와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동북아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의 마련과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은 평화문제에 있어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NGO평화연대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또한 동북아 평화문화형성을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 동북아차원의 평화적 협력관계와 아울러 한반도

<sup>10</sup> 조한범 외,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NGO”, 『동북아 NGO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9~12.

<sup>11</sup> 예를 들어 역사와 교과서 왜곡 문제같은 경우 각국의 국내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권차원의 한계와 공식외교관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의 경우 이와 같은 한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적 노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sup>12</sup>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포럼’과 같은 동북아차원의 평화협력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을 위한 동북아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주도의 평화학술회의의 정례화, 동북아 평화상 제정, 동북아 평화협력재단 등을 형성하는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V. 평화 NGO 지원방안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다수 NGO는 아직도 자립기반이 취약하며 평화 NGO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 이유는 서구에 비해 길지 않은 시민운동 역사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정부와의 생산적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문제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NGO 활동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회원중심제의 재정운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시민사회가 완전히 발달했다고 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경우 NGO가 단기간에 회원중심의 재정구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기반한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 있어서 NGO 활동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의 확대는 핵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바, 평화운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차원의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생활세계에서 평화운동의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평화운동단체와 일반시민 양자 모두의 노력을 전제로 하며 시민, 평화운동단체, 대학, 연구기관, 재단,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유기적 협력구도의 설정이 필요하다.<sup>14</sup> 평화운동단체의 경우 현재와 같은 특정주체에 국한된 전위적인 소수에 의한 사회운동에서 벗어나 일반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운동방식과 아울러 일상세계에 근접한 다양한 형태의 평화운동의제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성과지향의 운동방식보다는 시민사회 내에서 평화운동의 의의를 확산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의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기반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의 경우도 평화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화운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평화운동의 뿌리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점에서 일반시민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의 의식이 단기간에 성숙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NGO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평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금들이 평화운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화운동은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정

<sup>13</sup> 조한범,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방안”, 최송화·권영설 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서울: 법문사, 2004), pp. 131~134.

<sup>14</sup> “...인적, 물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정적 기반을 갖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부터 ‘1인 1평화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권고하고 ▲ 평화단체활동가 및 지원자가 평화운동 속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인적인 전망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재단,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된 교육 및 재충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 평화단체-대학(원)-해외단체와 연계된 공동연구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정옥식,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을 위한 7가지 제언”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워크숍, 2005.12.21), p. 1.

착과 궁극적 통일기반의 마련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과 평화이슈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기금의 지원과 운용에 있어서도 평화운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평화기금 조성노력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평화기금조성을 통해 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아울러 평화운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기금의 조성은 평화운동세력의 통일된 노력이 필요한바, 평화운동의 협의체 구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통일기금형성의 한 방법으로 ARS모금의 활성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평화운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ARS 모금방식을 활용할 경우 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아울러 경우 모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RS 모금방식의 활성화는 평화기금조성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VI. 맺음말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핵 문제가 상존하고 있듯이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상태의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은 정부차원의 행위자에 의한 외교안보적 문제의 해소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일상화해온 장기적 분단구조를 경유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평화운동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장기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비평화적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문화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의 불신의 토대가 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비정상적 근대화의 기억을 성찰적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차원의 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며 분단체제하 근대화의 여정에서 배태시켜온 비정상성에 대한 시민사회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소하는 성찰적 노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한반도의 냉전문화는 장기적 형성과정을 통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제도차원의 행위영역으로 해소될 수 없는 심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냉전문화의 극복과 평화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성찰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남북통합과정은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근대화를 정상화하고 남북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sup>15</sup>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화운동에 대한 상호정보교환과 아울러 공동협력사업의 실시, 그리고 평화운동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별 연대방식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평화운동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와 보다 효율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체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화와 전체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 있을 것이다.